

주간 통일정세

2017-1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41	北 김정은, 탱크병 경기대회 참관...“훈련은 전투이며 전쟁”(연합뉴스)
		北, 천안함 7주기 행사에 “어리석은 광대놀음” 비난(연합뉴스)
		‘한반도정세 분수령’ 4월...北매체는 김일성 생일 띄우기(연합뉴스)
	42	한대성駐스위스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평양에서 13~20일 제19차 ‘김일성화 축전’ 개최(연합뉴스) 北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은 사회주의 강국 승리”(연합뉴스)
	43	北,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최(연합뉴스)
		北 “우주개발서 머잖아 사변적 성과”...장거리로켓 발사 의지(연합뉴스)
		北 신문, ‘4월 대축전’ 강조...대규모 열병식 가능성(연합뉴스) 北, 완공앞둔 여명거리 선전...“궁궐 같은 살림집”(연합뉴스)
	44	김정은, 경제학자 서재영 빈소에 화환(연합뉴스)
		김영남, 러시아 대통령에 지하철 테러 관련 위로 전문(연합뉴스)
		北, ‘김정은 최고직 추대 5달’ 우상화 행사 시동(연합뉴스) 北,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개최(연합뉴스)
	45	김영남,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연합뉴스)
제22차 태양절요리축전 개막식 개최(연합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 기념 경축모임 개최(연합뉴스)		
경제	42	“北 평양 고급 아파트 가격 급등...최고 2억원대”(연합뉴스)
	44	北 “기업 수익, 경제건설 밑천”...계획보다 이익 우선(연합뉴스)
		北 이메일 수수료, 팩스보다 비싼 이유는?(연합뉴스)
	45	고려항공, 베이징행 노선 증편...“여름 성수기 앞둔 조치”(연합뉴스)
46	중국과의 교역, 북한 전체 교역의 90% 넘어(연합뉴스)	
사회 문화	41	北,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 노동신문 “경사났다”(연합뉴스)
	42	“北 보위성 마약 단속 강화...마약사범 구금시설 설치”(연합뉴스)
		北, 외부정보 접촉시 처벌 강화...최고 노동교화 10년(연합뉴스) ‘평양은 공사 중’...김정은 지시로 ‘초고층·초고속’ 건설(연합뉴스)
	43	北 중고 교과서 표지곳곳 탄도미사일 그림...김정은 업적 ‘찬양’(연합뉴스)

외교 국방		“北 보위부 요원, 정보유출 주민 단속 혈안”(연합뉴스)
		北, 김정은 경호사관학교에 빨치산 ‘리을설’ 이름 붙여(연합뉴스)
		속도전 물이에 北광산서 잇단 사고…‘희생정신’ 포장(연합뉴스)
	44	“北 청년층, ‘지금 누가 직장 다니냐’ 반발…시장 중시”(연합뉴스)
	41	트럼프 정부, 첫 무더기 대북제재…北석탄기업과 제3국 근무 11명(연합뉴스)
		北, 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안에 “가뭇물 바닷물 마르랴”(연합뉴스)
		“페루 주재 北대사, 우루과이 비자발급 거부당해”(연합뉴스)
	42	말레이 “주북 대사관 문 안닫는다…北근로자 외화벌이도 허용”(연합뉴스)
	43	北, ‘북한 정권 교체’ WSJ에 “질겁한 비명소리” 비난(연합뉴스)
		北 “어떤 사변 일어날지 곧 보게 될 것”…도발 시사(연합뉴스)
	44	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의결(연합뉴스)
		유엔총장, 北에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하라” 서한(연합뉴스)
		美 38노스 “北미사일 폭발 흔적 포착, 운반중 폭발한 듯”(연합뉴스)
	45	미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든 증거 검토”(연합뉴스)
		北매체 “美엔 말 안통해…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연합뉴스)
		합참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60여km 비행”(연합뉴스)
		北,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러 “北미사일 발사 포착했으나 위협 안되는 것으로 평가”(연합뉴스)
46	미국방관리 “北 미사일은 스킵 ER…비행중 결함으로 추락”(연합뉴스)	
	美 CSIS “北, 한달내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78%”(연합뉴스)	
	北 5일 미사일 발사 ‘실패’…美, 북극성2형→스킵ER로 수정(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1	조선인민군 탱크병 경기대회 2017 참관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윤동현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4. 1.

■ 北 김정은, 탱크병 경기대회 참관…“훈련은 전투이며 전쟁”(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탱크병(탱크병) 경기대회-2017'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감시소에서 경기대회 진행계획을 보고받고 시작 명령을 내린 김정은은 경기 중 탱크들의 성능을 칭찬하며 "역시 탱크는 우리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또 "훈련이자 전투이며 전쟁"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현대적 무장 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훈련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발언함.

2017. 4. 4.

■ 김정은, 경제학자 서재영 빈소에 화환(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 인민경제대학 연구사였던 고(故) 서재영 박사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4. 2.

■ 한대성 駐스위스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연합뉴스)

- 한대성 신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달 28일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라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2017. 4. 4.

■ 김영남, 러시아 대통령에 지하철 테러 관련 위로 전문(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지하철 테러와 관련해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4. 5.

■ 김영남,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5일 에콰도르의 레닌 모레노(64)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4. 2.

■ 평양에서 13~20일 제19차 '김일성화 축전'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생일을 맞아 평양에서 이달 13~20일에 제19차 '김일성화 축전'이 열린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함.

2017. 4. 3.

■ 北,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최(연합뉴스)

-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3일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전광호 내각부총리,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4. 4.

■ 北, '김정은 최고직 추대 5돌' 이상화 행사 시동(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되었다"며 전날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혁명적 경사, 위대한 전환을 안아오시여'라는 제목의 전시회에는 김정은의 '위인

적 풍모'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됐다고 신문은 보도함.

- 박춘남 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특대사변이며 혁명적 대경사"라고 주장함.

■ 北,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105주년을 앞두고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지난 3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룡남 내각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함.

2017. 4. 5.

■ 제22차 태양절요리축전 개막식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5돌을 앞두고 제22차 태양절요리축전 개막식이 지난 4일 리주오 내각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면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 기념 경축모임 개최(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4주년을 기념하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5일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주영길 직총중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렸다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4. 1.

■ 北, 천안함 7주기 행사에 “어리석은 광대놀음” 비난(연합뉴스)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1일 '천안호(천안함)의 망령을 살려서 얻을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는 천안호 침몰사건이 있는 지 7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 광대극이 펼쳐졌다"고 주장함.

- 이어 "천안호 침몰사건은 우리 공화국과 하등의 상관도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물론 남조선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천안호 침몰사건 7년을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도함.

■ ‘한반도정세 분수령’ 4월…北매체는 김일성 생일 띄우기(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두 개의 지면을 할애,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함.
- 신문은 '우리 수령님 인민과 함께 계시며 만리마 시대를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천만 군민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를 천세 만세 영원히 높이 모실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조국땅 방방곡곡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자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태양의 명 절(김일성 생일)로 빛나는 4월이 왔다"며 "해마다 맞는 4월은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보답의 열정을 더해주는 뜻깊은 달"이라고 보도함.

2017. 4. 2.

■ 北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은 사회주의 강국 승리”(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일 올해 시작된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고 보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최대의 중대사"라며 이같이 보도함.
- 사설은 전날 전면 시행에 들어간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쓰라린 좌절과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인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함.

2017. 4. 3.

■ 北 “우주개발서 머잖아 사변적 성과”…장거리로켓 발사 의지(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3일 "머지않아 세계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이 어떤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통할 수 없는 이중기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불변의 입장"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주체조선의 존엄과 민족 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우리의 우주개발 활동은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4월 대축전' 강조...대규모 열병식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이날 '뜻깊은 태양절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올해의 4월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달"이라고 보도함.
- 이어 "모든 경축행사들과 축전들이 주체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며 "뜻깊은 4월의 명절들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大)정치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완공앞둔 여명거리 선전...“궁궐 같은 살림집”(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바로 한 해 전 이곳에서는 려명(여명)거리 건설 착공식이 진행되었다"면서 "석 달 동안 함북도 북부(홍수)피해 복구 전투도 치러야 했지만 려명거리는 단 한 해 사이에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일떠섰다"고 보도함.
- 신문은 "곳곳에서 승리의 붉은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은 완공의 결승선, 자력자강 대승리의 결승선을 지척에 두었다"면서 "인민들이 살게 될 궁궐 같은 살림집들의 창문을 닦고 또 닦고 있다"며 마감 단계의 공정을 소개함.
- 신문은 또 "모든 창조물들을 단 하나의 사소한 부족점, 0.001mm의 편차도 없이 더욱 훌륭히 완성하여 인민들에게 넘겨주자"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7. 4. 4.

■ 北 “기업 수익, 경제건설 밀천”…계획보다 이익 우선(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1호(3월 5일 발행)에 실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은 경제강국 건설의 근본 방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별적 기업체들에서의 기업 순소득은 직접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밀천"이라는 대목이 등장함.
- 학보는 또 "모든 기업체들은 자체의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효과성을 보장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진정한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도함.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4. 2.

■ “北 평양 고급 아파트 가격 급등…최고 2억원대”(연합뉴스)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평양 시내의 주택 가격이 10년 전보다 2배로 올랐다"며 "평양 중구역의 5칸짜리 고급 아파트 가격은 최대 20만 달러(한화 2억2천만원)"라고 발언함.
-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 다음으로 평천구역이 12~13만 달러, 보통강구역이 10만 달러, 모란봉구역이 7만 달러임.
- 구역별로 아파트의 가격은 층수와 방수, 향방, 온수공급 등에 따라 5천~2만 달러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17. 4. 4.

■ 北 이메일 수수료, 팩스보다 비싼 이유는?(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무역업자들이 북한

측 파트너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그 이유가 북한 사업가들이 이메일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중국의 한 기업인은 "평양으로 팩시밀리 한 장 보내면 수신자가 4유로(약 4천 800원)를 지불해야 하는데 전자우편은 이보다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북한 측 대방(거래 상대)으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함.
- 중국 기업인은 이메일 수수료를 북한 무역기관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는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 때문에 북한 사업가들이 이메일을 싫어한다고 설명함.

2017. 4. 5.

■ 고려항공, 베이징행 노선 증편…“여름 성수기 앞둔 조치”(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베이징행 노선을 증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방송은 "증편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조치로 풀이된다"며 "다만, 지난해보다 약 3개월 일찍 주 5회로 증편된 것이 특이점"이라고 보도함.
- 고려항공의 평양 출발 선양 도착 노선은 운항 편수가 주 2회에서 10일부터 3회로 늘어날 예정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4. 6.

■ 중국과의 교역, 북한 전체 교역의 90% 넘어(연합뉴스)

- 6일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교역액은 60억2천만 달러(6조8천억원)로 집계됨.
- 북한과 중국의 총 교역액은 55억1천만 달러(6조2천억원)로, 북한의 총 교역액의 91.5%에 달함.
- 중국에 이어서는 인도가 대북 교역 규모 2위를 차지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4. 1.

■ 北,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 노동신문 “경사났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소나무 책가방'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은 나라에 뜻깊은 경사가 났다"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라는 역사적인 사변이 도래한 것"이라고 보도함.
- 앞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학령전(유치원) 1년, 소학교(초등과정) 4년, 중학교(중등과정) 6년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함.
-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기존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함.

2017. 4. 2.

■ “北 보위성 마약 단속 강화...마약사범 구금시설 설치”(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국가보위성 주도 아래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북한 내부사정을 취재하는 일본의 언론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북한 당국이 마약 사용과 소지, 유통량에 따라 형벌을 구체화하고, 마약사범을 구금하는 별도의 수용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전례 없이 강화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은 아시아프레스에 지난달 10일 국가보위성의 주도 아래 집중적인 마약 단속이 시작됐다면서 각성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자는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며 1g 이상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간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10g 이상 다룬 자는 무조건 관리소로 보내진다고 발언함.

■ 北, 외부정보 접촉시 처벌 강화...최고 노동교화 10년(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에 대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함.
- 이는 우리 정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가장 최근의 북한 형법인 2012년 5월 개정본에 비해 최고 형량이 늘어난 것임.
- '비법(불법) 국제통신죄'(222조)가 신설돼 불법적인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함.

2017. 4. 3.

■ 北 중고 교과서 표지 곳곳 탄도미사일 그림…김정은 업적 ‘찬양’(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개편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탄도 미사일 사진과 그림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를 인용해 3일 보도함.
- 북한은 2012년 교육체계를 다시 짠 뒤 2014년 교과서를 전면 개편했으며, 바뀐 교과서에서 '은하(銀河)'라는 탄도미사일의 사진·그림이 초급중 영어와 고급중 기초 기술 등의 표지에 실림.
-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 북한은 정보통신(IT) 관련 교육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됨.

■ “北 보위부 요원, 정보유출 주민 단속 혈안”(연합뉴스)

-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부 요원들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휴일도 반납하고 주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3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까지 보위성에 대한 검열을 결속(마감)하라는 지시가 하달되면서 국경 지역 주민 통제가 강화됐다"고 발언함.
- 소식통은 오는 15일 검열 마감 예고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위부 간부들은 해임·직위 해제 등의 처벌을 우려하며 실적 쌓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며 "빨간 날(일요일)도 반납하고 (정보유출) 주민 체포에 혈안이 돼 있다"고 설명함.

나. 시장관련

2017. 4. 4.

■ “北 청년층, ‘지금 누가 직장 다니냐’ 반발…시장 중시”(연합뉴스)

-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그루빠(단속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청년들에게 '왜 직장에 나가지 않는가' 등의 꼬투리를 잡으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들은 '지금 누가 기업소에서 일을 하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발언함.
- 이 소식통은 "무엇이라도 먹어야 직장도 나가고 일도 하는 것 아니겠냐"며 "알아서 먹고 사는 상황에서 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계속 와서 못살게 군다"고 주장함.

- 소식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았지만, 올해 들어 식량 상황이 악화하자 청년층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거리낌 없이 직장 대신 시장 활동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다"고 발언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4. 2.

■ ‘평양은 공사 중’…김정은 지시로 ‘초고층·초고속’ 건설(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 다녀온 한 유럽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2일 "북한 당국은 평양에 대규모 건축물을 계속 짓고 있다"며 "노후 거주지 개선을 위해 새 건물을 지으면서 축구장, 운동장 등도 신축하고 있다"고 발언함.
- 유럽 인사는 "대규모 건축 사업은 대부분 군 조직이 맡아서 하고 있다"며 "덕분에 건설 자재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등 추가로 드는 금액이 거의 없어 이런 대대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2017. 4. 3.

■ 北, 김정은 경호사관학교에 빨치산 ‘리을설’ 이름 붙여(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호부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 빨치산 출신인 리을설 전 호위사령관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3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TV가 새로 제작해 지난달 31일부터 방영하는 '위대한 동지 제5부 :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라는 제목의 김정은 우상화 영상에서 '리을설 호위종합군관학교'라는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든 군인의 모습이 포착됨.

■ 속도전 물이에 北광산서 잇단 사고…‘희생정신’ 포장(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광산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례가 관영 매체를 통해 잇달아 공개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당세포위원장은 오늘도 막장길을 걷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월 17일 사망한 평안남도 남덕탄광 노동자 김철진의 이야기를 소개함.

- 신문은 당 기층조직인 당세포위원장을 맡은 그가 위급한 순간 동료들을 대피시키고 숨졌으며 그의 희생정신을 부각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4. 1.

- **트럼프 정부, 첫 무더기 대북제재…北석탄기업과 제3국 근무 11명(연합뉴스)**
 -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힘.
 -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지임.
 -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웅(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돼 일하고 있으며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임.
- **北, 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안에 “기름에 바닷물 마르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제재에 기대를 거는 일간 망둥이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태도를 '천하 미시리(어딘가 모자라는 사람)'로 표현하면서 "그토록 가혹한 제재 속에서 첨단 문명의 상징인 여명거리가 보란 듯이 일떠선 것을 과연 보지 못하는가"라고 논평함.
 - 아울러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엄중한 대조선(대북) 적대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논평함.

2017. 4. 3.

■ 北, '북한 정권 교체' WSJ에 "질겁한 비명소리" 비난(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략적 패배자의 비명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미국의 우익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우리에게 대해 또 다시 악담질해댔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것은 대조선 정책에서의 전략적 패배자들, 완패한 자들이나 고안해 낼 수 있는 공여지책으로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 불패의 국력에 질겁한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어 논평은 "현실감각이 무딘 미국의 불순세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개나발을 불어대면 될수록 우리의 핵 타격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어떤 사변 일어날지 곧 보게 될 것"...도발 시사(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압박 소동을 또다시 벌여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회와 재무성(재무부)의 이러한 제재 망동은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 전야로 몰아가는 대결책동"이라고 주장함.
- "미국이 그 무슨 제재 따위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놀음을 우리가 어떤 사변들로 짓뭇개 버리는지 세계는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4.

■ 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의결(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킴.
-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 처리함.

-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2017. 4. 5.

■ 미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든 증거 검토”(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5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함.
- 이어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제외하고라도 이미 세계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함.

■ 북매체 “美엔 말 인통해…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연합뉴스)

-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은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도발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비대한 힘을 믿고 우리와 감히 맞서보겠다고 나선 미국에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우리를 어찌 보려고 움쩍하기만 하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강위력한 선제타격으로 남조선에 기여든 침략군만이 아니라 그 본거지까지도 잿가루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4. 1.

- 北 신문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정치 사기극”(연합뉴스)
 - 김학철 페루 주재 북한 대사가 우루과이를 방문하려다 비자(입국사증)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김 대사는 우루과이 중도좌파 정당연합체인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초청을 받고 지난주 비자 신청을 했으나 최근 우루과이 외교부가 이를 거절함.
 - 우루과이 외교부는 "김 대사의 우루과이 방문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음.

2017. 4. 2.

- 말레이 “주북 대사관 문 안닫는다…北근로자 외화벌이도 허용”(연합뉴스)
 - 2일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그쪽(북한)의 우리 대사관을 폐쇄할 의사가 없으며 그들 역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의 자국민 억류에 대한 보복으로 취해졌던 말레이시아내 북한인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면서, 북한국적자들이 다시 자유롭게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함.
 - 마시르 쿠왓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특정 경제 부문과 관련된 북한 근로자의 유입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북한 근로자 유입 여부는 건설 및 탄광 업계의 수요에 달려 있다"고 발언함.

2017. 4. 4.

- 유엔총장, 北에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하라” 서한(연합뉴스)
 - 유엔 사무총장 등이 북한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을 공식 촉구한 것으로 4일 파악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흐메트 위집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이 공동 명의로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 리용호 외무상 앞으로 발송했다"고 발언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4. 4.

■ 美 38노스 “北미사일 폭발 흔적 포착, 운반중 폭발한 듯”(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하려다 실패한 미사일은 운반 도중이나 발사를 위해 세우는 도중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38노스는 지난달 28일 원산의 갈마 공항(옛 원산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갈마 탄도미사일 발사대로 향하는 2번 활주로에서 직경 100m 크기의 불규칙한 폭발 흔적이 포착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함.
- 38노스는 이 흔적이 지난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없었다는 점에서, 22일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함.

2017. 4. 5.

■ 합참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60여km 비행”(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60여km"라고 밝힘.
- 이번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됐고 비행거리가 짧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 北,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60여km"라면서 "한미 양국 군의 초기 분석 결과, KN-15(미국이 북극성 2형에 부여한 명칭) 계열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태평양사령부는 함남 신포 일대 지상 발사시설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함.

-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탄도탄조기 경보레이더에 포착됨.

■ 러 “北미사일 발사 포착했으나 위협 안되는 것으로 평가”(연합뉴스)

-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감시 시스템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으나 자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 의회 지도부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시험에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비난함.
-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오제로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극동의 안보를 위협하며, 이와 관련 극동 지역 우주군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극동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2017. 4. 6.

■ 美 국방관리 “北 미사일은 스커드 ER…비행중 결함으로 추락”(연합뉴스)

- 북한이 5일(한국 시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 ER'로 파악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함.
-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AFP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한 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60km를 날아간 뒤에 비행 중 주요 결함으로 동해로 추락했다"고 발언함.
- 북한은 이 미사일을 함경남도 신포 인근의 '고정된 장소'에서 발사했다고도 발언함.

■ 美 CSIS “北, 한달내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78%”(연합뉴스)

-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78%에 달한다고 전망함.
- 또 2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이보다 다소 낮은 55%로 예상함.
- CSIS는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음.

■ 北 5일 미사일 발사 ‘실패’…美, 북극성2형→스커드ER로 수정(연합뉴스)

- 미국 언론들은 5일(한국시간) 국방부 관리 말을 인용해 북한은 전날 스커드-ER

-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동해에 추락했다고 보도함.
- 이는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15'(북극성 2형)로 판단한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수정한 것임.
 - 합참은 "한미 공동으로 초기 분석한 결과를 어제 설명한 바 있고 현 단계에서 이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은 없다"면서 "정확한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3	"韓, 정상회담 앞둔 美에 북핵실험·中사드보복 반대입장 전달"(연합뉴스)	
	4.4	정부,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美와 북핵·사드 긴밀 공조"(연합뉴스)	
	4.5	외교부 "美상원의원 서한... '中사드보복 철회' 입장 담아"(연합뉴스)	
	4.6	김관진·美맥마스터 통화... "北탄도미사일 규탄·강력대응"(종합)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5	전문가 "중국의 MD, 한국안보에 치명적 위협 가능성"(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3	한미일 해군 '北 SLBM 대응' 첫 대잠수함훈련(연합뉴스)	
			日관방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생각 없다"(연합뉴스)
	4.4		日관방장관 "한국 차기정권도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해야"(연합뉴스)
			북귀 日대사, 소녀상 이전 강력요구 시사...한일 여전한 간극(연합뉴스)
	4.5		日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부산소녀상 유감' 포함될 듯(연합뉴스)
4.6	통일부, 주한 일본대사 장관 면담 요청		

분류	일자	거절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1	美CSIS "미중정상회담서 대북금융제재 논의될 것"(연합뉴스)	
	4.3	트럼프 "中,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시진핑에 경고(연합뉴스)	
	4.4	美 1개 수상전투전대 서태평양 배치...中·北 견제(연합뉴스)	
	4.6	메케인 "트럼프, 시진핑에 북한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해야" 美백악관, 세컨더리보이콧 질문에 "미중정상회담의 초기 의제"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6	트럼프 "對北 모든 선택지 테이블에"...아베 "중국 대응 주시"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1	매티스 美국방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 매우 낮아"(연합뉴스)	
	4.3	美유엔대사 "러 美대선 개입 의심"	

		여지없어...상응 처분 받을 것"(연합뉴스)	
	4.4	트럼프, 푸틴에 전화..."지하철 테러 희생자 애도"(연합뉴스)	
		美·러·中, 'MD 무력화'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 본격화(연합뉴스)	
	4.6	조셉 윤 美대북특별대표-러 외무차관 회담..."한반도 정세 논의"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3	시진핑-아베 7월 정상회담 추진...이번주 中日 차관보급 협의(연합뉴스)	
		中관영매체 "日사드 도입 의도는 '군사대국화'...군비경쟁 촉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4.3	日아베, '지하철 폭발' 러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테러와 싸워야"(연합뉴스)	
	4.4	아베·푸틴 통화..."테러 근절 협력"(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4. 3.

■ “韓, 정상회담 앞둔 美에 북핵실험·중사드보복 반대입장 전달”(연합뉴스)

- 미·중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사드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3일 "북핵 문제와 사드 등과 관련,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희망하는 여러 형태의 입장을 미국 측에 이미 모두 전달했다"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방어용 무기이고, 이를 근거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설명함.

2017. 4. 4.

■ 정부,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美와 북핵·사드 긴밀 공조”(연합뉴스)

- 정부는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모멘텀(동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국의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 조치,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특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對) 중국 견인 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2017. 4. 5.

■ 외교부 “美상원의원 서한…‘중사드보복 철회’ 입장 담아”(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 상원의원 26명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중국의 대(對) 한국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에 대해 시기·대상·범위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그동안 미 의회 차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 중단 촉구 메시지가 중국을 향해 발신된 반면,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함.
- 이어 "시기적으로도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연명 서한 발송은 회담시 중국 측의 부당한 보복 조치 철회가 미 측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함.

2017. 4. 6.

■ 김관진·맥맥마스터 통화…“北탄도미사일 규탄·강력대응”(종합)(연합뉴스)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함.
- 김 실장과 맥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8시(우리 시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규탄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힘.
- 양측은 또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방침도 재확인함.

나. 한·중 관계

2017. 4. 5.

■ 전문가 “중국의 MD, 한국안보에 치명적 위협 가능성”(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미사일방어망(MD)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 이상호 대전대, 안성규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5일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실은 '중국 미사일방어망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함.
- 논문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MD를 비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MD를 실전 배치하고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러시아와 합동 MD 훈련을 해온 것이 중국의 MD 역사"라고 요약함.

다. 한·일 관계

2017. 4. 3.

■ 한미일 해군 '北 SLBM 대응' 첫 대잠수함훈련(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이 3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함.
- 국방부는 "해군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 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힘.
- 이어 "이번 훈련은 SLBM 능력 개발 등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3국의 대잠 탐색, 식별,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함.

■ 日관방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생각 없다"(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통화스와프 협의는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의 일시귀국과 함께 내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스가 장관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적어도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재개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2017. 4. 4.

■ **日관방장관 “한국 차기정권도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해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권도 2015년말 한일간 위안부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4일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함.
- 스가 장관은 "아직 한국 대선이 공식 시작되지 않았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데다 (이는) 한국 내정 문제"라면서도 "현 정권 및 차기 정권도 한일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귀 日대사, 소녀상 이전 강력요구 시사…한일 여전히 긴극(연합뉴스)**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4일 밤 85일만에 북귀(일본→한국)했지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도착 직후 김포공항에서 "아베 총리, 기시다 외무상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즉시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합의의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함.
- 그가 말한 '한일 합의의 실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뜻이다. 결국 부산 일본총영사관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옮기도록 현 정부와 내달 출범할 차기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임.

2017. 4. 5.

■ **日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부산소녀상 유감’ 포함될 듯(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이달 채택 예정인 2017년판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은 물론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최종 확정 단계에 있는 외교청서 원안에는 부산의

-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김.
- 원안은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일간 2016년에 개최된) 모든 정상·외무장관 회담에서 쌍방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강조하고 있음.

2017. 4. 6.

■ 통일부, 주한 일본대사 장관 면담 요청 거절(연합뉴스)

- 통일부는 85일 만에 서울로 복귀한 나가미네 아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홍용표 장관 면담 요청을 거절함.
-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브리핑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어제 오전 나가미네 대사의 통일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일정 등 여러 사항으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 오후에 전달했다"고 말함.
- 홍 장관은 통상 주변 4강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응해왔지만, 이번에는 거절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불응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짐.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4. 1.

■ 美CSIS “미중정상회담서 대북금융제재 논의될 것”(연합뉴스)

-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구소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북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의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회담에서 중국은행이 북한인이나 기업,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위장기업과 거래를 끊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함.

2017. 4. 3.

■ 트럼프 “中,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시진핑에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내놓은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힘.

2017. 4. 4.

■ 美 1개 수상전투전대 서태평양 배치…中·北 견제(연합뉴스)

- 미국이 해군 구축함과 항공전력으로 편성된 1개 수상전투전대(SAG: Surface Action Group)를 최근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함.
-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조치로 해석됨.
- 4일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 스테잇-듀이 수상전투전대가 지난달 31일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함.

2017. 4. 6.

■ 美백악관, 세컨더리보이콧 질문에 “미중정상회담의 초기 의제”(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6~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림.

- 매튜 포터저(43)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중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북접근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것은 정상회담 기간 있을 대화의 초기 의제"라고 답변함.

■ 매케인 “트럼프, 시진핑에 북한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해야”(연합뉴스)

- 존 매케인(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을 돕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매케인 위원장은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며 "만약 그들이 북한을 계속 지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이는 경제문제를 포함해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음.

나. 미·일 관계

2017. 4. 6.

■ 트럼프 “對北 모든 선택지 테이블에”...아베 “중국 대응 주시”(종합2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밝힘.
- 아베 총리 "오늘 통화에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7. 4. 1.

■ 매티스 미국방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 매우 낮아”(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은 현재로선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연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러시아는 전략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주 약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일부터 다른 국가의 선거들에 끼어드는 행동들까지 지금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은 기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2017. 4. 3.

■ 美유엔대사 “러 美대선 개입 의심 여지없어…상응 처분 받을 것”(연합뉴스)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일(현지시간) 밝힘.
- 그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도록 지시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러시아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전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를 비판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그 일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함.

2017. 4. 4.

■ 美·러·中, 'MD 무력화'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 본격화(연합뉴스)

- 마하 5(시속 6천120km) 이상의 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차세대 '극초음 무기' 개발 경쟁이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 본격화하는 분위기임.
- 서울과 부산 거리를 불과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뚫고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꿈의 신무기'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3국이 성큼

다가섰기 때문임.

-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MD 체계 돌파에 주력하는 반면, 미국은 신속 타격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함.

■ 트럼프, 푸틴에 전화…“지하철 테러 희생자 애도”(연합뉴스)

-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와 지원 의사를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러시아 국민에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함.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대 표시에 사의를 표하고 "테러리즘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할 악(惡)이라고 강조했다"고 페스코프는 소개함.

2017. 4. 6

■ 조셉 윤 美대북특별대표-러 외무차관 회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인사의 회담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외무부는 특히 "동북아 지역의 대결적 구도 해체와 전반적 군사·정치 긴장 해소 방향에서 안보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접근법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함.

라. 중·일 관계

2017. 4. 3.

■ 시진핑-아베 7월 정상회담 추진…이번주 中日 차관보급 협의(연합뉴스)

- 일본과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번 주 중 일본을 방문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 심의관(차관보급)간 협의를 통해 7월 독일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방안이 논의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작년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의 G20 정상회의, 같은 해 11월 페루 수도 리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음.

■ **중관영매체 “미사드 도입 의도는 ‘군사대국화’…군비경쟁 촉발”(연합뉴스)**

- 중국 관영매체는 일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는 달리 군사대국화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경계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은 3일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사전에 방비하는 '선발제인(先發制人)' 차원에서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지만 실제 북한의 핵위협은 일본에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함.
- 저우용성(周永生)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사드 도입을 통해 정작 노리는 것은 군사대국화와 전쟁 가능한 자위대 육성이라고 밝혔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4. 4.

■ **다이베, ‘지하철 폭발’ 러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테러와 싸워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러시아에서 전날 발생한 지하철 폭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고히 연대해 테러와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일본은 곤란한 상황에 부딪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국민과 함께한다"고 말함.

- 앞서 3일 오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에서 폭발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중임.

■ **아베·푸틴 통화…“테러 근절 협력”(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러시아에서 전날 발생한 지하철 폭발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테러 근절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NHK가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어떤 이유에서든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비난한다는 생각을 전했다"며 "러시아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앞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4	국제형사재판소장 “北 문제 UN서 회부돼야 다룰 수 있어”(KBS 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4.1	러시아서 척박한 삶 北노동자 3만명 이상...인권 실패는?(연합뉴스)
	4.1	한·일 공동 조사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미국의소리)
	4.4	윤병세,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北인권 책임규명’ 논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4.5	1분기 탈북민 작년보다 18% 줄어...北 통제강화 여파(연합뉴스)
	4.5	北, ‘라오스 북송 청소년’ 이름 바꿔 선전매체 등장시켜(연합뉴스)
대북지원	4.4	대북제재 모금 난항 속 유엔 260만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4. 4.

■ 국제형사재판소장 “北 문제 UN서 회부돼야 다룰 수 있어”(KBS 뉴스)

-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떤 범죄가 ICC에 가입된 당사국에서 일어났을 때와 범죄의 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일 때만 맡을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김정남 암살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부할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페르난데스 소장은 "말레이시아도 북한도 당사국이 아닌 만큼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며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어야만 하고, 해당 범죄가 ICC의 로마 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ICC는 형사 재판 시스템의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며 범죄가 일어나면 먼저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4. 1.

■ 러시아서 척박한 삶 北노동자 3만명 이상…인권 실태는?(연합뉴스)

- 와세다대 지역·지역간연구기구와 한국통일연구원, 리츠메이칸대학국제지역연구소,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가 1일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대 오쿠마타위에서 개최한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과견노동자에 관한 워크숍'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집단생활을 하며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 아울러 과도한 상납금 부담에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결국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함.

■ **한·일 공동 조사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미국의소리)**

- 와세다대학 연구기구와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리즈메이칸대학 국제지역연구소, 서울대 고동복지법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파견 노동자가 3만에서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실태를 조사한 공동 조사팀은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집단생활을 하며 국제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노동권 보장 없이 많은 상납금을 당국에 착취당하고 있으며, 보위부원 등 북한 당국자들의 감시와 통제 속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조사팀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선발에서부터 노동 현장까지 모든 게 인권 침해라며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2017. 4. 4.

■ **윤병세,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北인권 책임규명’ 논의(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윤 장관은 ICC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직 진출 추진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페르난데스 소장은 이에 한국이 설립 당시부터 ICC의 핵심 국가로서 여러 방면에서 ICC 활동을 지원해주는 데 사의를 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ICC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2017. 4. 5.

■ 1분기 탈북민 작년보다 18% 줄어…北 통제강화 여파(연합뉴스)

-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탈북민은 모두 278명으로 작년 동기(342명)와 비교하면 18.7% 감소했음.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탈북민이 적었던 2015년 1~3월(291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북한이 탈북민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탈북에 대한 감시·통제는 2015년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됐음.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전선이 설치됐고,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국경출입죄가 사면 적용 대상에서 빠짐.
- 또 탈북이 자주 발생하던 양강도 삼지연군(郡)에서는 아예 국경 인근 200가구 정도를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짐.

■ 北, '라오스 복송 청소년' 이름 바꿔 선전매체 등장시켜(연합뉴스)

- 북한이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복송됐던 탈북 청소년들을 4년이 지난 최근에도 대외용 매체에 등장시켜 체제선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나타났음.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 '금수강산'은 4월호에서 2015년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진학한 '권성철'과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에 다니는 '류광혁' 등 라오스 복송 청소년 2명의 대학생활을 소개했음.
- 기사는 "남조선 당국의 유인납치 행위의 희생물이 될 뻔했던 아이들이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갔다"며 이들이 어엿한 대학생들로 성장했다고 밝혔음.
-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복송된 청소년 중 2명이 처형되고 나머지 7명은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2014년 주장했으나, 북한은 이들을 기자회견에 세우고 학교생활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음.

5. 대북지원

2017. 4. 4.

■ 대북제재 모금 난항 속 유엔 260만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UN CERF) 약 260만달러가 북한의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도발이 향후 유엔의 대북지원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기구는 북한 내 36개군에 어린이와 산모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만성적인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긴급 배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달 31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아이린(IRIN)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취해진 대북 제재가 유엔 등 구호단체 모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관 미쉬라 유엔 상주조정자는 아이린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